



보도시점

2024. 11. 6.(수) 15:00
(브리핑 시작시) 이후 사용

배포 2024. 11. 6.(수) 10:00

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

위장-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

-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
-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
- ‘선차단 후심의’ 의무화,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규정
- 처벌-관리-보호-교육 등 범부처 대책으로 엄정 대응할 것

- 정부는 오늘 국민의힘 ‘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’에 「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」을 보고하고,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.
- 지난 8월 ‘대학가 딥페이크’, ‘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’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,
 - 「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(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, 8.30)」를 구성해, 시급한 입법*·행정조치**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,
 - * 주요 법안 국회 통과(9.26): △허위영상물 제작·유포 법정형 5년→7년 상향 △허위영상물 소지·시청 처벌 신설(3년) △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△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
 - ** △경찰 집중단속(8.28~’25.3.31) △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(8.27~) △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(8.28) △방심위-텔레그램 핫라인 구축(9.3) 등
 - 관계부처 협의, 관련 전문가·업계의 의견수렴, 당정협의 등을 거쳐 「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」(별첨)을 마련하였다.
-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△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△플랫폼 책임성 제고 △신속한 피해자 보호 △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.

처벌강화	• 처벌강화, 수사 대응력 확대(위장수사 확대 등), 국제사법공조 강화
플랫폼 관리	• 사업자 의무 강화, 해외사업자 협력
피해자 보호	• 삭제 지원 강화, 디성센터 원스톱 서비스, 딥페이크 예방·탐지 R&D
예방교육	• 대상별 맞춤형 교육, 대국민 인식제고

□ 김종문 차장은 “정부는 앞으로도 ‘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’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, 단속강화, 법안통과,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* 별첨 :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성훈 (044-200-2082)
		담당자	사무관	이승훈 (044-200-2083)
담당 부서	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정일선 (044-203-7112)
		담당자	사무관	이인숙 (044-203-7115)
담당 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신상열 (044-202-6120)
		담당자	사무관	양윤아 (044-202-6142)
담당 부서	법무부 형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태형 (02-2110-3269)
		담당자	검 사	이윤석 (02-2110-3544)
담당 부서	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윤전 (02-748-5168)
		담당자	중 령	강정은 (02-748-5171)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영호 (044-203-2911)
		담당자	서기관	채정재 (044-203-2913)
담당 부서	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	책임자	과 장	노현서 (02-2100-6161)
		담당자	사무관	강동근 (02-2100-6162)
담당 부서	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우석 (02-2110-156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호 (02-2110-1549)
담당 부서	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관	책임자	과 장	정혜원 (02-2110-2451)
		담당자	사무관	정준호 (02-2100-2454)
담당 부서	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함영욱 (02-3150-1605)
		담당자	경 감	이용세 (02-3150-1073)
담당 부서	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정균 (042-481-5168)
		담당자	서기관	권성호 (042-481-5074)